



여전한 조폭 문신... 판치는 불법시술

“폭력조직 가입하려면 필수”
조폭 등과 결탁 2000여명에 시술 25억 챙기고 의료용 마약 소지도 광주지검, 불법시술업자 12명 기소 미성년들 비용 마련하려 범죄까지



16세 미성년자가 국제PJ파 가입 당시 문신시술업자에게 시술받은 문신.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중화를 외치던 '문신'이 여전히 조폭문화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명 '조폭문신'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미성년자들도 고객의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공갈 범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문신 시술업자가 쉽게 고객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폭력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점을 업계 관행으로 보고 과거처럼 문신을 조폭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 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한 문신 시술업자는 업소 내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A씨 등 문신 시술업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명 '조폭문신'을 시술한 미성년자가 피부염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을 시술받은 미성년자가 32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4명이 실제 폭력조직에 가입했고 고객의 문신 시술비용 마련을 위해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폭문신 시술비용은 1인 기준 통상 200만~500만원 수준이지만, 전신에 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청구됐다.
전문업자들은 불법 시술로 벌어들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했다.
이들은 폭력조직 관련 고객은 휴대전화에 폭력 조직별로 분류해 별도로 저장해 관리했다. 또 폭력조직원들과 호형호제를 하며 경조사를 챙기고 밀접하게 결탁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 시술업자는 압에 걸린 가족을 이용해 마약성분의 의약품을 제공받아 이를 업소내에 비치하고 있다며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조직폭력배 활동을 돕고 범죄 수익을 챙기는 이들에 대한 단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투(문신)술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일부 시술업자들의 비행을 업계 관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음성화된 문신 시술은 범죄조직과 연루될 수 밖에 없고 위생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한 시술업자는 “정부가 ‘비의료인의 타투 작업 합법화’를 위한 타투 양성화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면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만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전문업자들로부터 확보한 시술명단을 분석하면서 폭력조직에 가입하고자 조폭문신

집착형 잔혹범죄 예방 '안심 울타리' 운영

전남도자치경찰위, 스토킹 피해자 안심세트 배부 등 추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 같은 집착형 잔혹범죄의 예방을 위해 안심 울타리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집착형 잔혹범죄 안심 울타리 운영 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치안-주민생활 안전시책'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핸드폰 등으로 문밖 방문자를 인식하

도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사 양성 교육을 동시대 상담심리학과에 위탁했다. 이에 동신대는 상담학회 2급 등의 자격을 갖춘 상담사 23명을 8월부터 22개 경찰서에 배치해 스토킹 행위자의 상담치료에 나선 예정이다.
조만간 위원장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근절하겠다”며 “피해자의 두려움 해소와 일상 회복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주변 도로 보수공사 마무리 못한 까닭은? 단속 못하는 이면도로에 차량 2대 주차

“차 빼달라” 요구에도 거절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하려다 인근 상인의 반발에 부딪혔다.
현대산업개발은 31일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민의 교통 편의 개선 및 상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포장공사를 했으나, 인근 상인이 주차한 차량 2대로 인해 공사를 마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3월 광주시 서구청으로부터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훼손된 이면도로를 보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데 따라 추진됐다. 금호하이빌 상가 앞 길이 100m, 폭 10m의 도로를 재포장하는 공사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동안 입주예정자 등과 보상 협의의사를 하느라 공사를 하지 못했으나, 보상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30-31일 금호하이빌 상인 대다수가 휴가를 간 데 따라 공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31일 공사 현장은 인근 상인 A씨 소유의 1t 화물차와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대산업개발은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신고를 받은 광

주서부경찰과 서구청 관계자도 현장을 확인했으나, 불법 주차차를 단속할 수 없는 이면 도로라 현행법상 차량을 강제 이동시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이들 차량이 주차된 부분을 제외한 채 나머지 도로만 보수·포장했다.
A씨는 아직 현대산업개발과 붕괴사고 관련 피해 보상금 관련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발표된 금호하이빌 상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반발하는 뜻에서 차량 이동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가 건물에 발생한 균열 및 침수가 화정아이파크 공사와 무관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상가 인근 도로도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므로 재검증을 위해서는 도로를 원상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은 차를 빼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 공사는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금호하이빌상가 변영회 등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막아세우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민단체, 대법원에 강제동원 신속 판결 촉구

“5년 가까이 계류... 고령의 피해자들 기다리기 힘들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사법부에 5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일제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지, 일본 피고 기업에 힘을 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30일 별세한 고(故) 김재림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은 미쓰비시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선고로 4년 7개월째 기다리다 결국 모두 운명하셨고 남은 원고는 고령의 피해자 유족 한명뿐이다”며 “이 외에도 강제동원 관련 소송 중 9건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머지 판결을 지체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들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12월 이후 4년 7개월째 판결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꼬집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가 마지막 기별 곳은 사법부밖에 없었지만 대법원은 할머니의 이러한 바람을 끝내 저버렸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채용 알선’ 1억 가로챈 70대 구속

자녀 채용 알선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챈 뒤 잠적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채용시켜주겠다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A(71)씨를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지인 B(66)씨의 자녀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교직원으

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가로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교육계에 지인이 많다는 식으로 B씨를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억원을 건넨 이후 1년 7개월이 흐른 지난 3월까지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채용도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Card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